

ISSUE BRIEFING

2020. 12. 18
Vol. 237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조경옥_여성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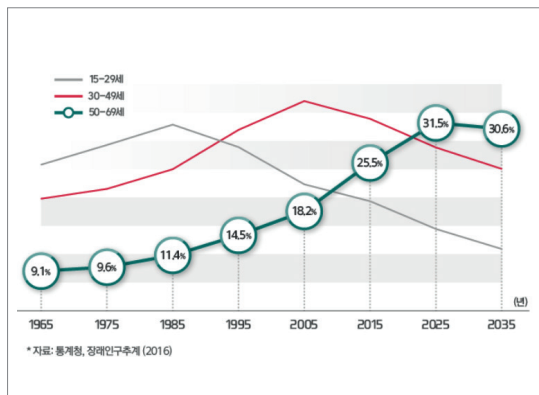
CONTENTS

I. 고령화 사회,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신중년	02
II. 신중년 정책방향 및 지자체 대응	05
III. 신중년 정책 확대 및 추진과제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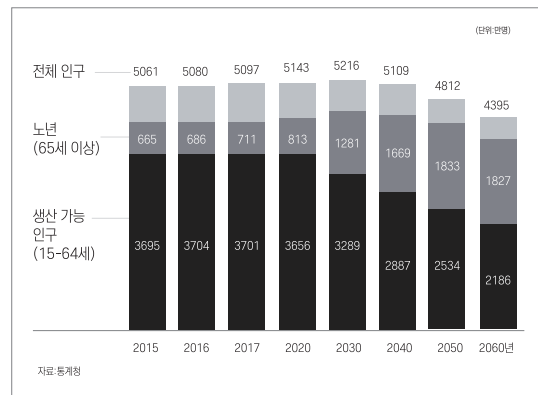
I. 고령화 사회,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신중년

1. 신중년(5060세대)은 총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차지

- 2019년 기준 50~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층은 14,978,028명으로 총 인구의 2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총 인구의 30.6%에 해당
 - 전북은 2019년 기준 546,485명으로 총 인구의 30.0%를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551,100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32.6%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비중을 보임
- 신중년층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의 은퇴 효과 등으로 2020년대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전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3,656만 명, 2060년에는 2.1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전북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121만 명, 2030년 104만 명, 2047년에는 7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방차원의 중장년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개입 중요성 대두



〈그림1〉 신중년 인구비중 추이(전국)



〈그림2〉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

2. 신중년 퇴직자의 증가로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핵심노하우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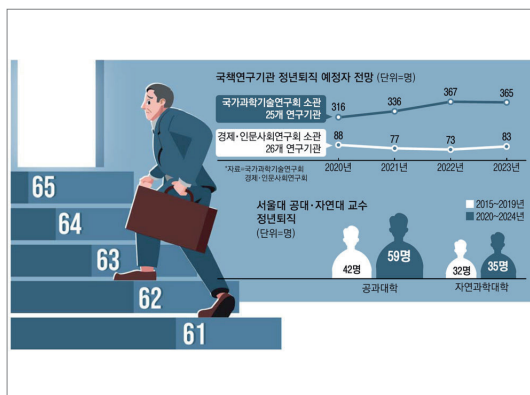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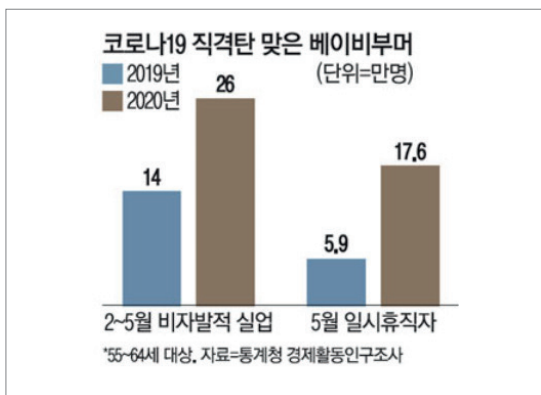
- 신중년세대 중 가장 큰 인구집단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정년이 2016년부터 시작 되어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에 도달하는 등 대량 퇴직에 직면
- 특히 코로나19 발병으로 55~64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층의 비자발적 실업은 전년 대비 12만 명 급증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

-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병 이후 2월~5월 사이에 비자발적 실업¹⁾에 처한 중고령인구(55~64세)는 26만8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6300명(80.5%)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휴직 등의 고용대란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55~64세에 해당하는 이들의 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사실상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취업시장에서의 강제 은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교수인력 등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러시'로 인해 이들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 경험이 현장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될 경우 국가적 손실 발생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소속 25개 국책연구기관의 정년퇴직 예정자는 2020~2024년까지 총 1,743명으로 전체 인원(총 1만 4377명)의 12%에 해당하며,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소속 26개 기관의 연구직 정년 퇴직자는 2014년 28명에서 2020년에는 61명으로 두 배 정도 증가
-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의 2020년 정년퇴원 교수는 59명이나 되는 등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력, 기술, 경험, 핵심노하우 등이 사라질 위기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학력, 고숙련 인적자원의 경험과 연륜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이후 네트워크나,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고도화 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출처: MK뉴스, '과학기술 브레인'1743명 퇴직러시...핵심노하우도 사라진다(2020.7.1.)

3.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성

• 신중년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자 정책대상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49.4세('19년)이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실질은퇴연령과 은퇴희망연령은 72세(경제활동 고령자부가조사, '16)로 동일함. 따라서 신중년의 재취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는 인구감소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초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생산가능 인구를 20~69세로 조정할 경우 생산가능 인구에서 신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1%에서 2050년 54.1%로 크게 높아짐. 반면 노인 부양비는 상대

1) 비자발적 실업이란 직장의 휴·폐업, 조기퇴직·정리해고, 기간제 근로만으로, 취업실패·사업부진 등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일을 그만 둔 경우를 말함

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2020년 21.7%→14.6%로, 2040년 60.1%→ 41.1%로 2067년에는 102.4%→ 76.1%로 감소하게 됨

• 신중년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현재의 신중년층(50~60세대)은 건강 및 교육, 경제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과거 중년층 및 고령층과는 다른 정책적 욕구를 지니며, 또한 과거 사회문화 운동을 주도한 세대들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높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변화 필요
- 신중년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본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은퇴 시기는 49.4세로 밝혀지고 있어 은퇴시기와 노년기 진입(65세)사이에 공백기는 더 큰 경제적 위기와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지닌 신중년층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감이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이나 전략은 미흡한 실정임

• 신중년 인구는 향후 20년 내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지므로 대응정책마련 시급

- 신중년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2020년부터 이들이 65세 노인으로 편입됨. 정년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붐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준비 미흡으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 부각
- 노동시장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 완료 및 준비 중인 신중년은 전체의 41.4% 수준에 불과/ 61~79세 연금 수급자 66.3% 가운데 52%는 25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출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관계부처합동(2017))
- 신중년은 현재 중년층이나 고령층과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노인중심 정책에서 중장년 정책으로 연령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중심 중장년 대책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전방위 정책으로 지원 범위 확대 추세. 특히 노인인력 활용 정책은 복지 차원의 단순 일자리 제공위주로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초고령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신중년 정책 확대로 전북의 인구정책 관리 필요

-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연도는 2026~2030년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지난 2019년 10월 기준, 고령인구 20.24%로 전국평균 보다 7년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
-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년층의 조기퇴직은 생산가능 인구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노인부양비 부담과 노후빈곤 등 지방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신중년 활력저하를 막고 적극적 인력활용을 위한 전북의 신중년 인구정책 확대 필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로 신중년의 조기퇴직이 지속, 확대되면서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각 지자체의 대응 마련이 활발해지고 있어 전북차원의 대응마련 시급

II. 신중년 정책방향 및 지자체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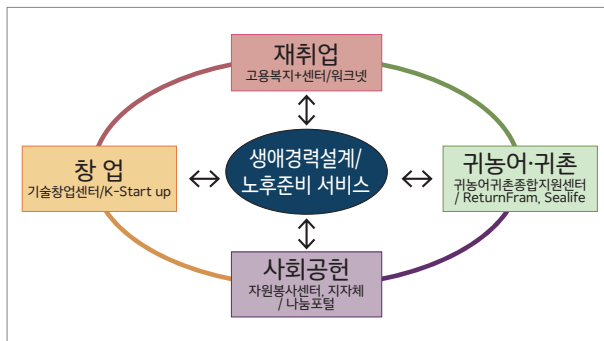
1. 중앙정부의 신중년 정책방향

◎ 신(新)중년 개념

- 신중년은 퇴직 후 20여년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활력있는 생활인을 지칭
 - 신중년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72세까지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준비를 하는 과도기 세대 (5060세대)를 지칭
 - 신중년에 대한 정책용어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2017)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음

◎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 중장년인구 증가 및 조기퇴직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경로를 미리 설계, 준비하도록 신중년 맞춤형서비스 확충
 -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2017)의 주된 목적은 5060세대의 주된 일자리(1모작)→재취업일자리 (2모작) →사회공헌일자리(3모작) 등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은퇴 경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에 해당
 - '인생 3모작으로 활력 있는 신중년(Active Ageing)'이라는 비전으로 ①고용가능성 확충(재취업) ②창업의 질 향상(창업) ③정착성공률 제고(귀농·귀어·귀촌) ④사회공헌활동 저변확대(사회공헌) 등의 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자료: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계획', 관계부처합동(2017.8.8.)

비전				
인생3모작으로 '활력있는 신중년'(Active Ageing)				
목표	고용가능성 확충	창업의 질 향상	정착성공률 제고	사회공헌활동 저변 확대
추진과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 신중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신중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 신중년 고용환경 개선	비생계형 기술 창업 활성화 • 과밀업종 진입억제 및 틈새시장 개발 •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 기술창업 교육의 내실화 및 제도권 환경 조성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어·귀촌 실현 • 정착 및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 자원봉사 기반 확대 •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충
체계적 경로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 초고령화 이행, 코로나19로 인해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어 저활용되는 50~60대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매칭하거나 사회서비스 활동에 활용
 - 정부는 초고령화의 진행과 맞물려 코로나 19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확대가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2020.5)을 발표함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2020.5)의 구체적 목적은 저활용되는 50~60세대의 지식·경험·노하우 등이 사장되지

- 않도록 중소기업-퇴직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매칭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산업분야별 특화된 퇴직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②차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③사회활동 지원 내실화 ④퇴직전문 인력 활용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위주로 복지 성격이 강한 현행 고령인력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2. 지자체의 정책대응 현황

◎ 신(新)중년 관련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현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련 조례(또는 생애재설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추세임

〈표〉 지방자치단체 중장년지원조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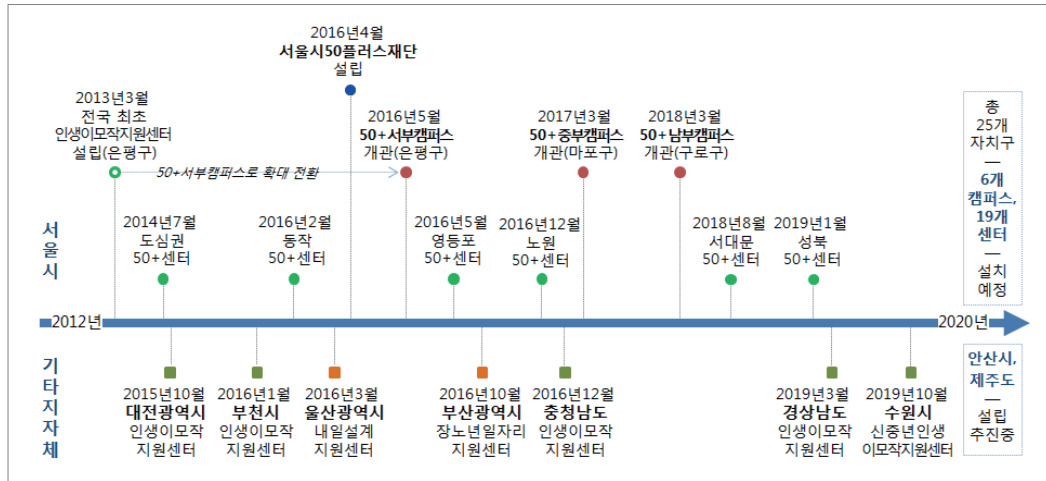
연령기준	용어	지자체	합계
40~64	중·장년층	서울(강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경기(남영주시, 용인시) 강원(인제군) 전남(여수시)	기초7
45~64	중년층	광주(동구)	광역시1 기초2
	장년층	광주(광역시)	
	신중년층	경남(양산시)	
50~64	신중년층	경기(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전북(전주시) 전남(광양시, 나주시)	광역시 10 기초 29
	중년층	대전(대덕구, 유성구)	
	장년층	서울(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광역시), 전북(광역시), 경북(광역시), 제주(광역시), 서울(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인천(연수구), 전북(완주군), 전남 순천시	
	중·장년(층)	대전(광역시), 경기(광역시), 부산(중구), 경기(안성시), 전남(담양군), 전남(해남군)	
	예비노년세대	충남(광역시), 충남(아산시)	

자료: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분석,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2020)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은평구에 설치되어 확대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로는 2015년 대전광역시를 필두로 현재 부천, 울산, 부산, 충남, 경남 등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

〈표〉 전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추세



자료: 고양시 중장년생활실태 분석연구, 고양시정연구원(2019)

◎ 신(新)중년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현황(2019~2020)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중년 지원계획 및 정책들은 지역의 인구특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
 - 지역에 따라 중장년, 중년, 신중년 등으로 정책용어가 다양하고 정책대상연령도 40부터 69세까지 상이함. 각 지자체는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자리와 사회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40대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중앙정부 차원의 신중년 지원계획 및 정책들은 고령사회 대비 및 노후준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갖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방안 제시하고 있으나 지자체 신중년 지원사업은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 각 지역에 따라서는 신중년을 고령화 사회 대비 새로운 성장 동력세대로 보고 인력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을 설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중앙정부 공모사업만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간 신중년 정책에 대한 비전은 격차가 큼

〈표〉 지방자치단체의 신중년 지원 주요사업 및 특성

지역	주요사업 및 특성	지역	주요사업 및 특성
서울	▶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세대 50+지원강화 - 50세대들의 생활안정지원, 일자리와 생애전환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 수립	경기	▶ 중장년일자리지원사업 - 생애주기별맞춤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4060재취업지원 사업 진행
부산	▶ 신중년 활력-UP종합계획수립(2019) - 신중년세대의 사회·경제적경험 자원화 - 일자리확충, 재능공유와 소통, 건강 및 여가지원을 위한 3대전력 11개 중점과제	강원	▶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신설(2019.10) -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사업 진행
대구	▶ 50+세대 생애재설계지원 종합계획(19) - 50+세대 新행복문화창출과 안정적 노후를 위한 일자리, 사회참여, 교육문화, 기반구축의 네 영역 추진과제 수립	충남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지원

인천	▶ 5060신중년 일자리사업 실시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19~23) 수립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의 정책과제 제시	전북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전국 최초로 4개소의 은퇴자 직업공간을 설치 운영
광주	▶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본격추진 -생애전환기 장년층(45~64세)의 재취업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남	▶ 4050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도내 4050 미취업자에게 구직경비 지급,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위해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취업특강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
대전	▶ 2020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은빛멘토코칭사업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여 과학도시 대전 특화사업 추진	경북	▶ '맞춤형 종합일자리 경북 4050행복일자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창업지원,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미스매치 해소
울산	▶ 내일설계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령친화도시조성, 은퇴,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이음새 새출발 사업 등	경남	▶ 2020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마련 -신중년 재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제주	▶ 예비노년층 노인준비지원종합계획(17.4) -조례제정 및 교육, 여가, 인생재설계,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준비 지원	충북	▶ 수요자 맞춤형,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미스매치해소

자료: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분석,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2020)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III. 신중년 정책 확대 및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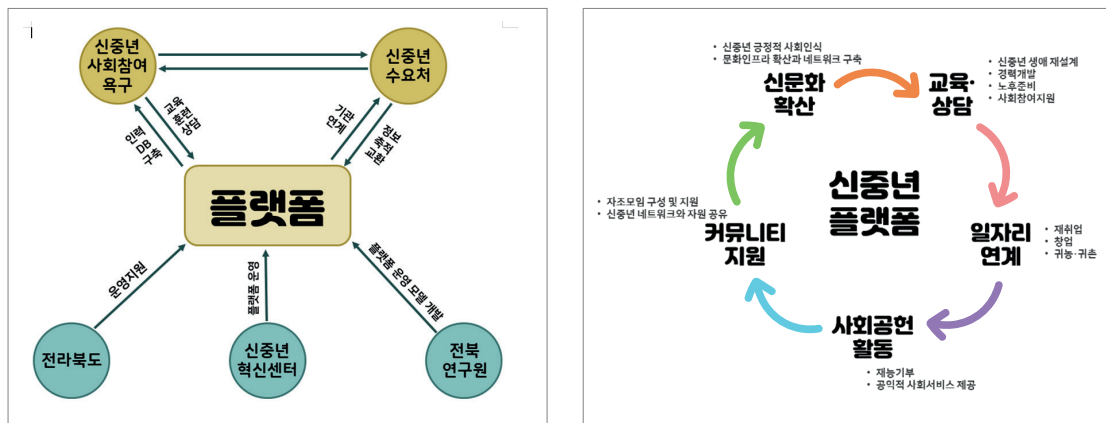
1.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신중년 정책 기조 확대

- 고령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고령화정책의 핵심대상인 노인 중심의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미래의 노인계층인 신중년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비용 부담 감소 및 노인 개인의 삶의 질 제고 필요
 -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8)과 50세 이상의 '신중년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2020.5)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몇 지자체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종합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음
 - 지금까지 전북의 사회정책과 인구정책은 아동, 노인, 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타 시도에 비해 신중년층 인구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초고령화 사회에 일찍 진입한 전북은 신중년 정책에 대한 기조와 관련 사업을 확대 할 필요 있음
 - 신중년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 팀 단위 행정조직 신설이 필요함. 전북의 경우 신중년을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년 일자리는 일자리취업지원팀에서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은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설치,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수원, 안양, 남양주)와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신중년일자리 전담팀을 두고 있음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

2. 전라북도 신중년 사회참여지원 플랫폼 구축

- 신중년세대가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거점기관(가칭 '신중년 혁신센터')의 설치·운영 필요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전환기에 있는 신중년층은 일, 노후준비와 재무, 가족, 여가, 사회공헌, 사회관계 등에 대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50+센터(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북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신중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유사사업의 통합 및 연계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 필요
 - 특히, 기존의 50+센터 기능이 교육·상담 및 체험에 치우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욕구(일자리, 여가·문화활동, 사회공헌활동 등)를 실현할 수 있는 수요처(일반기업,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축적과 교환, 연계 등이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함



자료: 부산광역시 50+세대 사회참여 지원 플랫폼구축방안 (2018)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신중년 전문인력 DB구축 및 활용

- 신중년의 일자리매칭 및 중소기업-퇴직전문인력 적재적소 매칭,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사회 서비스 활동, 프로보노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신중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DB구축과 관리 필요
 - 정부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2020.5)의 핵심은 조기퇴직으로 저활용되는 50~60대 전문인력을 만성적인 숙련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술·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의 중소기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경험·노하우 등을 활용,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퇴직 전문인력이나 신중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일자리 매칭 및 사

- 회공헌 활동 등 기타 정책 집행에 있어 인재활용의 어려움이 있음
- 신중년 및 퇴직 전문인력의 기초적인 인재정보 뿐만 아니라 활동역량과 경력, 희망하는 사회활동 분야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DB구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함

4. 지역사회 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 공공과 민간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개인적 보람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함께 고려한 전복형 중장년 적합 일자리와 활동 등 새로운 일자리모델 개발이 요구됨
 - 신중년은 기존의 고령자나 노인과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활력 있는 생활인으로서 인식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이 다양화, 확대되는 추세임. 특히 신중년 인구, 고용, 산업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신설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시(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부산시(신중년 인생3모작 부산특화사업), 대구(전문직 퇴직자 중소기업지원사업), 광주(중장년여성취업지원 아이돌봄 전문가양성), 대전(과학해설사 및 청년창업 기술아이디어코칭사업), 경기(세대융합형 신중년창업 서포터즈)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전북도 지역의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중심의 전복형 신중년 일자리와 활동모델 개발이 필요함

5.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신중년 종합계획 수립

- 신중년 인적자원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 정부의 신중년 대상 인생3모작 정책은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신중년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함
 - 따라서 전북의 신중년 삶을 경험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등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과 구축을 토대로 신중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
 - 신중년층은 인구규모가 큰 만큼 이들의 구성도 다양하여 내부 생활상이나 가치관, 정책욕구도 다양함. 신중년층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성별 및 연령별, 경력 특성과 욕구파악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됨

<참고문헌>

보건사회연구원(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현황 분석
부산복지개발원(2018), 부산광역시 50+세대 사회참여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2019), 고양시 중장년 생활실태 분석 연구
_____ (2019), 고양시 50+세대 인생후반전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인천광역시 연수구(2019), 50+세대(베이비부머)육구조사 및 정책수요
경기복지재단(2019),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 수립 연구
경기연구원(2018),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전망
일자리기획단(2018),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모델설계 및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보도자료(2017.8.8)
_____ (2020),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보도자료(2020.5.15.)
MK뉴스(2020.7.1.), '과학기술 브레인' 1743명 퇴직러시, 핵심노하우도 사라진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12. 18 Vol. 237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